

보도설명자료 (‘16.1.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, ‘관치 에너지펀드’ 논란(‘16.1.21. 이데일리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채난이 심각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2조원 규모 신규 펀드 조성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< 펀드 조성 필요성 >

- 한전 펀드는 에너지新산업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, 중소·벤처기업과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
 - 에너지신기술과 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,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전력산업과 전력망에 수용할 필요
 - 사모펀드(PEF) 등 시장의 막대한 민간자금을 에너지新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한전의 선도적 투자가 중요
 - 거대 공기업의 독자적인 에너지新산업 투자는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, 민간과 한전의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도 펀드가 필요
 - 한전의 부채감축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, 앞으로는 한전이 에너지新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

< 한전 부채감축 상황 >

- 한전은 본사 부지매각 대금(10조 5,500억원)을 전액 부채상환에 활용하고 있으며, 현재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

* 부채비율(별도): (‘13) 135.8% → (‘15.3분기) 101.5% (△34.3%p)

* 부채비율(연결): (‘13) 202.3% → (‘15.3분기) 163.7% (△38.6%p)

< 참고: 해외 주요 전력 유틸리티 부채비율 (‘15.9월 기준) >

(佛 EDF) 548%, (獨 RWE) 566%, (英 National Grid) 347%, (美 Exelon) 249%

- 한전과 정부는 펀드 조성 필요성에 대해 **그간 긴밀히 협의**

< 향후 펀드 운용방향 >

- 한전 펀드는 전력분야 신기술 개발 및 벤처기업 육성,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
 - 전력분야 신기술 창업 기업의 확산,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, 스마트그리드, 전기소비자 서비스 향상 투자 등을 실시
 - 펀드를 통해 육성된 중소기업과 한전의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**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**도 추진
 - PEF 등 민간대응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, **민간투자 구축** 방지
- 기존에 한전이 운영해온 펀드(중소기업 육성펀드(‘15.8월))보다 규모를 확대하고, **정부와 한전의 긴밀한 협의를** 바탕으로 구체적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**에너지新산업을 육성**

※ 한전 펀드를 포함, 전력新산업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과장 (044-203-5260)
권덕중 팀장 (044-203-5261)